

# 북핵·포용정책, 국감장마다 與野 격돌

## ■국회 을 국정감사 돌입

13일 국회가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국방위, 행정위, 문광위, 정부위 등 각 상임위에서는 북한 핵실험 사태에 따른 대북 포용정책 등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핵 실험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되는데 따른 군의 대비태세와 한미공조체제 강화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를 냈으나 전시 전작권 환수 및 핵 보유 등에 대해서는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북한의 저공침투기인 AN-2기가 소형 핵무기를 싣고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에 착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북한은 특수전 요원 10~15명이 탑승 가능한 AN-2기 300여대를 실전배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북한이 저급의 핵폭탄을 개발해왔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소형화, 유도탄에 탑재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겠느냐”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 계속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행정위 국감에서 “핵무장론”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위 감사에서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이 “핵을 가진 상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우리도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미국의 핵우산 밑으로 들어가야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며 동의 여부를 묻자 이용섭 장관은 “예”라고 대답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오른쪽) 의원이 13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저공침투기인 AN-2기가 소형 핵무기를 싣고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에 착륙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광웅 국방 “북핵 소형화·유도탄 탑재 분석중”

## 이용섭 행자 “핵무장론”에 공감한다” 파장 일듯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따른 대북교류사업의 지속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부분별한 대북교류사업을 통해 현금을 지원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열린우리당은 핵실험 사태에

도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국회 정부위의 국무총리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북 핵실험에 대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잇박자’ 발언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꼬집고 나서는 등 신경전이 펼쳐졌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북한의 핵실험 파문과 관련, 대통령과 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이 다르다”고 주장하자, 한명숙 총

리는 “입장이 다른 부분은 없다”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진의가 전달돼야지, 단어 하나하나를 보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은 북한의 핵실험에도 정부, 여당이 대북포용정책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 중단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불모로 냉전시대로 돌아가겠다는 발상”이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임동욱 기자 tuim@

# “北 모래대금 4,200만불 인민무력부로 들어가”

## ■국회 재경위 국감 통일부 “사실 무근” 반박

정부가 북한모래 반입 대금으로 지원한 4천200만달러 전액이 북한의 인민무력부에 건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2002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북한모래 반입대금은 4천200만 달러이며 전액 북한 인민무력부에 지급됐

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관세청 자료를 인용, 북한모래 반입량이 2002년 9천680t(금액 8만6천달러), 2004년 43만2천903t(146만7천달러), 2005년 608만5천666t(2천298만1천달러), 올해 들어 6월까지 476만2천983t(1천739만5천달러)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2003년에는 북한모래 반입이 없었다.

그는 금강산 온천장(355억원), 문화회관(300억원), 온정각(245억원) 매입과 학생 금강산체험학습 경비, 학생 및 이산가족의 관광경비(245억원) 등이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일외교부는 이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우선 우리측 교역업자들이 2004년부터 지난 6월까지 북한에 모래 반입 대금으로 지급한 액수는 4천200만달러가 아니라 약 1천만달러(660만m)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통일부 “對北 포용정책 비난 수용 못한다”

### “쌀 그냥 준적 없다” 퍼주기 부인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북 포용정책을 매도, 매장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핵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대화를 병행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기자간담회에서 “핵실험이란 상황이 일어나선 안됐고 막았어야 했는데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

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1994년 북미 기본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거론한 뒤 “포용정책은 이 두가지가 잘 되라고 믿 것”이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도 대북 경수로 자금을 대겠다고 미국에 서한으로 약속했고 9·19 공동성명을 내기 위해서도 천신만고의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포용정책이 왜 책임지고 매를 맞아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북에) 쌀 한 톨 주면서 그냥 주지 않았다”며 2004년 설악산 정상급회담에서 주자수 문제를 합의한 뒤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쌀 차관 제공에 합의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연합뉴스

## “환율 방어” 개입 22조원 날린 공무원 책임 없다”

환율방어를 이유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가 수십조원의 손실을 국민에게 안긴 담당공무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3년 이후 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해 22조원의 손실을 낸 담당자들이 사후에 책임을 졌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정부는 한 명을 사후처리했다고 하는데 IBRD 이사로 보낸 게 불이익인가”라며 “나머지 5명은 모두 승진했다. 아무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연합뉴스

## 살빠지는 콜라 나온다

### 코카콜라 내달 ‘엔비가’ 시판

코카콜라는 칼로리 연소를 촉진해 체중을 줄여주는 ‘마이너스 칼로리’ 음료 ‘엔비가’를 11월에 발매한다고 영국 인디펜던트와 CNN머니 인터넷이 13일 보도했다.

코카콜라에 따르면 ‘엔비가’에는 천연 활성식품 미량원소인 칼슘과 카페인을 비롯, 녹차 추출물인 에피갈로카데킨 물질자산염(EGCG)이 함유돼 있다. 이들 미량원소는 칼로리 연소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엔비가’를 마시면 신진대사가 촉진돼 칼로리 연소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마시는 것 만으로도 체중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딸기맛, 복숭아맛, 녹차맛 등 3가지로 12온스 캔 포장에 1.29~1.49달러에 시판될 예정이다.

코카콜라는 ‘엔비가’ 자체 칼로리는 5인대 비해 18~35세의 건강한 사람이 하루 12온스 캔 3개를 마시면 최고 100칼로리가 연소돼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잃는 칼로리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코카콜라가 네슬레와 공동으로 개발한 이 제품은 내달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미국 전역에 시판될 예정이며 내년 이후 전세계에 발매될 계획이다. /연합뉴스

## 빛日만평

- 김중두

그렇게 못해서 미치지??!

## 빈곤퇴치운동·무담보 소액대출 앞장

### ■노벨평화상 수상 유누스·그리민 은행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유누스 박사는 지난 1976년 그리민 은행을 설립해 빈민을 상대로 한 무담보 소액대출(microcredit)운동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자립토대를 만들어주는 운동을 주도했으며 이후 이같은 모델이 전세계로 확산됐다.

제8회 서울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그는 또 경제활동을 원하는 주부들 상대로 소액대출운동을 확대해 여권신장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그리민 은행은 현재 직원 1만8천151명, 2천185개 지점을 운영하는 거대은행으로 발전했다.

1940년 방글라데시 차타공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유누스 박사는 다카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밴더빌트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귀국해 72년부터 차타공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하지만 그는 대학 인근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 27달러가 없어 고리대금업자의 횡포에 시달리는 현실을 목격하게 되면서 무담보 소액대출운동을 시작했다.

담보도 전혀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대출해 주는 그리민 은행의 독특한 운영방식은 무모해 보였지만 상환율이 98%를 웃도는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 이 같은 대출제도는 현재 한국,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등 전 세계 37개국에서 9천200만명을 대상으로 운영될 정도로 폭넓은 반향을 일으켰다. /윤영기기자 penfoot@

## 시설

## 안보리 대북 제재안 평화적 해결 우선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한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13일 대북 제재결의안의 막판 쟁점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이 ‘선전포고’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된다.

대북 제재 결의안이 당초보다 완화된 것은 다행이다. 군사적 제재 가능성을 열어 놓는 포괄적 대응 비군사적 제재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 7장 41조를 축소하고 무기금수도 ‘포괄적인 무기금수’에서 ‘중화기’로 대상을 국한시켰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강경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 안보리가 결의안 채택을 둘러싸고 장기간 갈등을 빚을 경우의 각종 부작용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결의안은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압박이라는 의미가 있다. 국제사회는 철저한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에 나서되 결의안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북결의안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제사회는 무력충돌 등 북한의 불필요한 반발을 부추길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북한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하고 하루빨리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 북한은 비군사적 경제제재 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의안에 반발,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강행해서 파국만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지자체 투·융자사업 심사 더 강화하라

예산확보나 사업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일단 사업을 벌여놓고 보자는 일선 지자체의 주먹구구식 사업추진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전남도가 12일 도 본청과 일선 시·군에서 신청한 올 하반기 투·융자 사업 50건에 대해 심사를 한 결과 겨우 30%(15건)만이 적정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조건 이행 후 추진이나 사업 재검토,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

목포시와 여수시는 각각 150억원과 67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담양군은 투·융자 심사 대상도 아닌 77억원 규모의 사업을 신청했다 반려됐다고 한다. 수십억, 수 백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물론 투·융자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른 지자체의 배모(?)와 무지에 놀라

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개막되면서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체장의 선심성 공약 이행 등을 위해 재정여건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없이 중부투자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뿐이다.

지자체의 투·융자 사업도 민간부문처럼 투자 대비 회수 비율을 적용해 성과를 관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산 배정에 앞서 사업설계가 타당하지 치밀하게 검토하고, 집행에 앞서 성과 목표를 관리하는 체계의 정비를 통해 단 하루의 혈세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려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 및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

##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해파리 공동 퇴치하자”

최근 전남을 비롯한 우리나라 여정에 큰 피해를 불러오고 있는 대형 해파리 방제 방안에 대해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이 공동으로 연구를 벌인다.

전남도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전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4회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수산교류 회의에서 최근 어선어업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형 해파리에 대한 대응을 양국의 공동 연구과제로 채택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대형 해파리에 대한 공동 연구 과제 채택 이외에

‘어류가 서식하는 여장 환경과 생태계 보전 계획’, ‘낙시공원 조성 현황’, ‘양식 수산물 생산이력시스템의 운영사항’ 등으로 양국 시도현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부 사항에 대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또 양국의 수산자원을 늘리는 노력의 하나로 신안군 불부기도 해상에서 자원이 고갈돼 가고 있는 참돔과 자주복 2만여마리를 방류하는 어류종묘 공동 방류행사도 가질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순천 화상경마장 반대”

### 전남 시·군 의장, 결의안 채택

한국마사회가 순천에 화상경마장 오픈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시·군 의회 의장들이 화상 경마장 설치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13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 의회에서 열린 전남도 시·군의회 의장회의에서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22개 시·군 전 의장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채택된 결의안은 13일 청와대, 국회, 농림부, 행정자치부, 한국마사회 등에 보내졌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 본사 문화사업국 김중만 차장

### 신문발전공로 ‘신문협회상’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1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회원사 발행인과 수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본사 김중만(사진) 문화사업국 차장 등이 신문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신문협회상을 수상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略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안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